

제14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THE 14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회장인사	President's Greeting		2
일 정	Schedule		4
프로그램	Program		6
심포지움	Symposium		
	E의 평화체제 구축의 모색과 전망』 ospects for Systematic Peace Building		15
문재인 경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한반도 비학	백평화 프로세스 고유환 동국대학교	16
조선반도	평화보장체제수립에 대하여	심승건 조선사회과학원	23
남북 간의	기 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에 관하여	백태웅 하와이대학	28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아시아질서	김경일 베이징대학	39

회장인사

저는 국제고려학회를 대표하여 제 14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라하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국제고려학회가 처음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지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제고려학회가 오늘까지, 둘이 아닌 하나의 코리아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뜻있는 학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코리아세계" 속에서 서로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해오신 분들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국제고려학회는 남북/북남을 포함 세계 코리아학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학회 중의 하나입니다. 해가 갈수록 국제고려학회의 회원과 참가자가 늘어나고 연구주제가 다양해 지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친 국제고려학회의 노력의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고려학회가 진정한 국제적 코리아학 학술단체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6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앞으로 이틀동안에 남북/북남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미국, 터키, 칠레, 뉴질랜드 등에서 133명의 학자분들이 자신의 최신 학술성과를 발표해주실 겁니다. 규모와 수준을 갖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학술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온갖 힘을 기울여오신 마렉 제마넥 교수님을 비롯한 프리하 찰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 성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분들이 바친 시간과 공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이루어질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구 상의 여러 나라, 지역에서 활약하시는 여러 분들과 코리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연구성과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프라하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앞으로 반드시 찾아올 코리아의 미래-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만남이 될수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코리아의 언어, 문학, 역/력사, 종교, 철학, 예술, 교육 뿐만 아니라 정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연구와 토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시는 수많은 코리아학 연구자들이 모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 연구자들이 토론회기간 중에 서로간의 회포를 나누고 절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론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부딪칠 "의견 차이"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는 서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전보다 더 존경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평화와 연대의 초석입니다. 코리아,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도 그 연장선상에서 전망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프라하 학술회의가,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모든 코리안이 함께 할수 있는 장래, 우리 모두가 평화와 조화속에서 공존할수 있는 미래의 초석이 될 학자들 사이의 "동지애"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기간 중 참가해주신 여러분들의 성과와 건강을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고려학회 회장 연재훈



President's Greeting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ur to welcome you to Prague and the 14th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It has been nearly 30 years since ISKS hosted academic conferences such as this gathering. We are proud that we have been providing a forum for scholars who view Korea as one Korea, bridging the ideological division that has made it difficult for Koreans from one side of the peninsula to talk with Koreans from the other side.

The ISKS conference is one of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gatherings of Korean Studies scholars in the world including both sides of Korea. I am very pleased to see a growing number of participants and diversifying research topics in Korean Studies in ISKS as time goes by. I believe that this is the result of the efforts of the ISKS over a long time.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you all members for your hard work.

With your help, we have created a truly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organization. There are over 160 participants here today, and 133 of you will present a paper to share your research with scholars not only from both sides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with scholars from China, Japan, Europe, USA, Turkey, Chile, and New Zealand. It takes a lot of work to organize a conference such as this. We all owe a debt of thanks to Professor Marek Zemanek and his staff at Prague Centre for Korean Studies at Charles University as well as to the hard-working staff in our headquarters in Osaka, Japan. Without the time and energy they have devoted to making this day possible, we would not be meeting here today.

In preparation for peace and re-unification that will surely come, we are meeting here to exchange research results with colleagues from all over the globe on topics related to Korea's past, present, and future. We will discuss about Korea's language, literature, history, religion, philosophy, arts, and education as well as its politics and medical science. Research and discussions are importan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we have come here to spend two days becoming acquainted with other scholars of Korea from other countries. Over these two days, we will discover many areas in which we have different opinions. However, those differences will make it possible for us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in the process, learn to respect each other even more. Such growing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will strengthen the prospects for peace and solidarity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world in general.

Let us therefore take full advantage of these two days of academic comradeship in Prague to work together to build a better world, a world in which the Korean people can be together and a world which we all will be able to enjoy a peaceful and harmonious co-existence.

Thank you so much.

Jaehoon Yeon

President,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제14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The 14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일시 / Dates 2019년 8월 18일(일)-20일(화) / August 18(Sun)-20(Tues), 2019

주최 / Co-organized 국제고려학회 /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카렐대학교 프라하한국학연구소

/ Prague Centre for Korean Studies, Charles University

장소 / Venue 체코, 카렐대학교 철학대학 첼레트나 20동

/ Celetna 20 Building, Faculty of Arts, Charles University, Czech Republic

Address: Celetna 20, Praha 1

언어 / Language Korean, English

지원 / Support Asian Research Found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분과 / Sessions 언어 / Linguistics 역/력사 / History 사회 / Sociology

정치 / Politics 교육 / Education 예술 / Arts

의료 / Medicine 민속 / Folklore 문학 / Literature

철학·종교 / Philosophy & Religion

특별분과 / Special Session

-예술 -아리랑- / Arts -Arirang-

-민속 -식문화- / Folklore -Food culture-

-다큐멘터리 영화『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일코리안 음악-』

/The Documentary "Crossing over the Arirang Pass -Zainichi Korean Music-"

심포지움 / Symposium

『한/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모색과 전망』

"Exploring Prospects for Systematic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제14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The 14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Tel: +81-6-7660-8045 / Fax: +81-6-7660-7980

isks14th@isks.org

http://www.isks.org/office/head/conf2019.html

대회 일정 / Schedule

August 18(Sun) 13:00- 등록 및 호텔 체크인 / Registration and Check-in

- Hilton Prague Old Town

19:00 저녁식사 / Dinner

- ASIAN TEMPLE : Bílkova 13, Praha 1

August 19(Mon) 09:00 개회식 / Opening Ceremony

- 카렐대학교 철학대학 첼레트나 20동

/ Celetna 20 Building, Faculty of Arts, Charles University
: Celetna 20, Praha 1

10:00- **분과회 / Sessions**

중식 / Lunch 12:40-14:00

다큐멘터리 영화 / The Documentary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일코리안 음악-』

"Crossing over the Arirang Pass -Zainichi Korean Music-"

국제고려학회 제13차 운영위원회 / The 13th Executive Committee

19:30 **환영 연회 / Reception**

- Krčma U Pavouka : Celetná 597/17, Praha 1

August 20(Tue) 09:00- 분과회 / **Sessions**

중식 / Lunch 13:10-14:30

14:30 심포지움 / Symposium

『조선/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모색과 전망』

"Exploring Prospects for Systematic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심승건 | 조선사회과학원 Sim Sung Gon | Academy of Social Sciences

고유환 | 동국대학교 Koh Yu-hwan | Dongguk University 김경일 | 베이징대학 Jin Jingyi | Peking University

백태웅 | 하와이대학 Tae-Ung Baik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사 회 : 서정근 | 야마나시현립대학

Seo Jeong-Gun | Yamanashi Prefectural University

17:00 총회 및 폐회식

/ The 14th ISKS General Meeting and Closing Ceremony

19:00 폐회 만찬 / Farewell Banquet

- Plzenska restaurant : náměstí Republiky 5, Praha 1

August 21(Wed) 해산 / Departure

		/	August,	19 (Mon)			Ī				August,	20 (Tue))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00				9:00	언어4	언어6						
		ᅰ취	l / Open	ning Cere	manı				5054	언어6						
		게외크	i / Opei	iiig Cere	HITOTTY						력/역사					
											4 4					
Linguistics 언어1	Literature 문화1	History 억/력사	Society 사회1	Medicine 의료1	Education 교육1	Politics 정치1	Arts 예술1	10:00				사회4	Philosophy & Religion		정치3	
Ti oli	E-1-	1	시작기	T #1	- A-41	941	세트.					시의4	철학		8/10	
													/종교1			-Arirang- 예술
																-아리랑-
								11:00								
										언어7	역/력사		철학	교육3		
											5		/종교2			-Food
	몬학2	력/역사	사회2	의료2	교육2				언어5						정치4	culture-
		2						12:00								<u>민속</u> -식문화-
언어2							예술2					사회5				
			12	:40				i								
								10:00								
			중	AT.				13:00				13	:10			
				nch												
												_	식			
								14:00					r≃ nch			
						정치2		14:00								
												1.4	:30			
				Folklore								17	.50			
			사회3	민속				15:00								
								13.00								
	문학3										심.	포지엄 /	Symposi	um		
									힏	/조선	반도의	평화체	제 구축	의 모식	색과 전	망
언어3		역/력사 3						16:00					Systema			
		J						10.00			on t	he Kore	an Penir	rsula		
			다큐	·멘터리 영	화 / The	Documer	ntary									
						재일코리인										
						พอมคร Arirang Pa		17:00				17	:00			
				-Zainich	ni Korean	Music-"										
										Th. 2 400	101/0 0		폐회식	01- 1		
										The 14th	i ISKS Ge	neral Mee	eting and	Closing C	eremony	
								18:00								
																\vdash
								19:00								
											폐회		:00 rewell Bai	nguet		
											H-1			-1		
		.		:30 Reception	on											
			/													

		언어 / Linguistics (1-5)	
	언어1	사회 : 이상혁 (한성대학교)	
	10:00	중국 요녕 지역 조선어의 음운특징에 대하여	강용택 (중앙민족대학)
	10:30	15세기 문헌 《월인석보》에서의 불교용어와조선어한자어 관계 고찰	김광수 (연변대학)
	11:00	한국어 단모음(單母音)의 길이에 대하여	오재혁 (건국대학교)
	11:30	파스파문자로 된 蒙古字韻의 字母韻과 四聲通解의 蒙韻音 대조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언어2	사회 : 연재훈(런던대학)	
19	12: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ical meaning and social meaning of honorifics in Korean: a study of honorific pronominal use in political context	Xi Chen, Jungmin Lee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일	14:00	북한 조선글서체의 원형과 원류(1909-2019) -청봉체,천리마체,명조체,맺힘체의 기본 서체를 중심으로-	류현국 (쓰쿠바기술대학)
	14:30	조선어 정보화에서 인명해석 방법에 대한 연구	지동은 (연변대학)
	15:00	흑룡강성 조선어 중노년층 담화의 발화형식 -기층방언의 출현에 주목하여-	다카기 다케야 (게이오대학)
	언어3	사회 : Rainer Dormels (University of Vienna)	
	15:40	한국 드라마의 중국어 번역 연구 — 응답하라 1988을 대상으로 —	황림화 (상하이해양대학)
	16:10	언어순화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지명 - 『문화어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서민정 (히토쓰바시대학)
	16:40	전달 매체의 변화에 따른 국어 텍스트의 변화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17:10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 여	방정호 (조선사회과학원)
	언어4	사회 : 김광수 (연변대학)	
	9:00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 사용 연구 -모국어 화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의정 (연세대학교)
	9:30	한국어 교육을 위한 요청 이메일의 분석 -추천서를 부탁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고지마 다이키 (긴키대학)
	10:00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에 대한 대조언어학적연구	김영윤 (김일성종합대학)
	10:30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정체성 연구	이정란 (한국학중앙연구원)
20 일	11:00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북한의 <조선어강독> 교재 분석 연구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강독1 실습생용』, 『조선어강독2 실습 생 용』(2015)과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어강독2 실습생용』(2007)을 중 심으로 -	전영근(광동외어외무대학) 오현아(강원대학교)
	언어5	사회 : 방정호 (조선사회과학원)	
	11:40	훈민정음의 <언해본> -고려대 도서관 육당문고 소장의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정광 (고려대학교)
	12:10	훈민정음 학습 자료의 역사적 변천과 그 해석	백두현 (경북대학교)
	12:40	홍기문의 『正音發達史』(1946)에 제시된 『訓民正音』(1446) 번역에 대하여 -<해례> 번역과 그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혁 (한성대학교)

		문학 / Literature	
	문학1	사회 : Jeongsoo Sh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0:00	재일조선인문학에 나타나는 북한문학의 양상 -1953년도 『해방신문』을 중심으로-	오은영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0:30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적대적 갈등 양상 연구	김영희 (광동외어외무대학)
	11:00	작품에서 보는 재일조선인 시인 金時鐘과 제주 4・3	오카자키 료코 (리쓰메이칸대학)
	문학2	사회 : 송남선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1:40	漢文本 <金華寺記>의 異本 系列 研究 - '金華寺 系列'을 中心으로 —	양반 (길림외국어대학)
19	12:10	『경도잡지(京都雜誌)』 「풍속(風俗)」 번역의 오류 문제	진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	14:00	『駱舵祥子』한역(韩译)본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 번역 연구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고홍희 (산동대학)
	14:30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rough the Lens of Humour: A Study on the Works of Bak Mingyu	Marion Delarche (School of Advances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문학3	사회 : 김영희 (광동외어외무대학교)	
	15:10	윤흥길「종탑 아래에서」 언어의 계량적 분석 연구	황혜란 (홍익대학교)
	15:40	Making King Peony in Korean Literary Tradition: Appropriating the Chinese Flower in Sino-Korean Narrative	Jeongsoo Sh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6:10	역사의식을 통한 문학 교육 -이범선의 단편 소설 「오발탄」중심으로-	팔라 메디네 (앙카라대학)
	16:40	「허생전」에 투영된 박지원의 경제사상 -서구경제학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영빈 (대외경제무역대학)
		언어 / Linguistics (6-7)	
	언어6	사회 : 김영수 (연변대학)	
	9:00	『한어한국어 분류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	김청룡 (중앙민족대학)
	9:30	최현배의 『우리말본』에 기술된 일본어 문법 비평	와다 다카히로 (교토산업대학)
	10:00	한국어 에크리튀르의 사적 고찰	이승자 (상해해양대학)
20 일	10:30	구문 문법 시각에서 본 한국어"NP+ADV+V" 중간구문과 중국 어"NP+V起来+ADV" 중간구문	장염 (상해외국어대학)
	언어7	사회 : 김청룡 (중앙민족대학)	
	11:10	중국 조선족 언어와 언어문화의 전망과 과제	김영수 (연변대학)
	11:40	조선시대 외국어의 수용 고찰 -만주어를 중심으로-	김은희 (제주대학교)
	12:10	연변지역 조선어 입말 사용실태 고찰	최순희 (북경언어대학)
	12:40	중국 조선족 성인 가요의 언어 사용 양상 연구	황은하 (배제대학교)

		역/력사 / History	
	역/력사1	사회 : 정재훈 (경북대학교)	
	10:00	포스트-촛불 : 문명개화에서 신문명개벽으로	이병한 (원광대학교)
	10:30	한국 정부의 대(對)오키나와 인식의 변화에 대한 검토 - 1948 년 ~ 1975 년을 중심으로	나리타 치히로 (도시샤대학)
	11:00	'6.25전쟁' 중에 보인 한국 '국민'의 재정의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중심으로-	고민성 (고베대학)
	역/력사2	사회 :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11:40	1930년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맑스주의적 헤겔철학 수용 : 신 남철을 중심으로	박민철 (건국대학교)
19	12:10	일본군 위안소 설립과 조선인 여성의 '위안부' 동원	송규진 (고려대학교)
일	14:00	일제말기 신문을 통해 본 '조선해협철도터널' 구상의 배경 - 21세기 동북아철도공동체 전망을 위하여 -	정태헌 (고려대학교)
	14:30	3.1인민봉기와 그 력사적교훈에 대하여	리종익 (조선사회과학원)
	15:00	조선동해의 고래자원을 략탈한 일제의 범죄적책동	리영 (조선사회과학원)
	역/력사3	사회 : 홍양희 (한양대학교)	
	15:40	18세기 조선과 또 하나의 '근대' - 영조(英祖)와 영조시대를 중심 으로 -	정재훈 (경북대학교)
	16:10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河回 풍산류씨豊山柳氏의 현실 대 응과 관계망의 변화	김명자 (경북대학교)
	16:40	우리 나라 고문서의 류형과 고문서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문제	리철 (조선사회과학원)
	17:10	18세기 조선 가족의 두 얼굴, 평등과 차별	김정운(경북대학교)
	역/력사4	사회 : 리종익 (조선사회과학원)	
	9:30	新羅 眞興王代 對陳 外交와 그 의미	조범환 (서강대학교)
	10:00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풍수도참(風水圖讖)	한정수 (건국대학교)
	10:30	대동강류역에서 첫 고대국가 고조선성립의 사회력사적전제에 대하여	지화산 (조선사회과학원)
20 일	역/력사5	사회 : 고민성 (고베대학)	
	11:10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 - 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11:40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과 일본의 '가족법의 민주화'와 여성 시민권	김은경 (숙명여자대학교)
	12:10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이혼' 판례 비교 연구 시론	홍양희 (한양대학교)
	12:40	신라 진성여왕의 양위과정과 배경	김선주 (중앙대학교)

		4	
		사회 / Society	
	사회1	사회 : 정아영 (리츠메이칸대학)	
	10:00	Identities at the Border: North Korean Atomic-Bomb Survivors Living in Japan	Yuko Takahashi (Kyushu University)
	10:30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siting of nuclear power facilities in South Korea	Heike Hermann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1:00	월경(越境)하는 사자의례(死者儀禮) - 제주4·3사건 이후 부계 친 족집단의 경험적 지식	고성만 (제주대학교)
	사회2	사회 : 윤정수 (바이카여자대학)	
19일	11:40	구비설화를 활용한 청소년 생명지킴이 생명존중교육 문학치료 사례 연구	김혜미 (한림대학교)
	12:10	남북한 주민의 상호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14:00	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의 정체감 재구성	김혜경 (백석대학교)
	사회3	사회 : Heike Hermann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4:40	The Making of the Postcolonial Political Economy: The Disposition of Formerly Japanese Owned Enterprises in South Korea, 1945–1960	LI Tingting (Peking University)
	15:10	Leadership Attributes from Gender perspective: Implications on Next-Generation Asian Women's Leadership	CHO Sung-Nam (Ewha Womans University)
	15:40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 및 인사노무관리 성공사례	이재학 (고려대학교)
	사회4	사회 : CHO Sung-Nam (Ewha Womans University)	
	10:00	상호교차성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 가족의 이주 경험	홍정은 (리츠메이칸대학)
	10:30	The Korean Garment Business and Ethnic Network in Argentina (아르헨티나 한인 의류업과 이민자 네크워크)	김지혜 (센트럴 랑카셔 대학교)
20	11:00	터키 한국전쟁 참전용사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한국인, 그 약자의 형상	조홍윤 (터키국립이스탄불대학)
일	11:30	1960년대의 재일한국인 학생운동과 "조국"의 위치: 당사자 인터 뷰를 중심으로	김우자 (리츠메이칸대학)
	사회5	사회 : 고성만 (제주대학교)	
	12:10	한국 영화 속 식민지 도시 경성의 재현과 여/성	양인실 (이와테대학)
	12:40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인구사회학 적 특성, 일본어능력, 사회적 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조형범 (도시샤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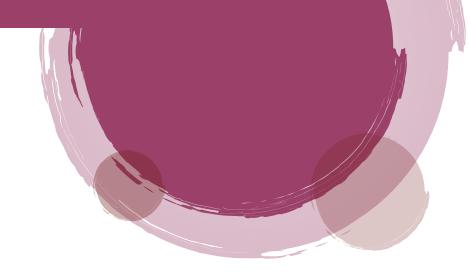
-	

		5	
		의료 / Medicine	
	의료1	사회 : 황상익 (서울대학교)	
	10:00	731부대와 한반도	하세가와 사오리 (인하대학교) 최규진 (인하대학교)
	10:30	한국 지방자치단체 특성으로 파악한 지역의 출산영향요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수연 (서울대학교)
	11:00	한국의 첨단의료와 생명윤리 거버넌스: 현황과 한계	최은경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2	사회 : 김수연 (서울대학교)	
19 일	11:40	시대와 운명을 같이 한 한국 최초의 의사 김익남	황상익 (서울대학교)
린	12:10	한반도/조선반도의 외과적 마취술의 도입과 전개	이규원 (서울대학교)
	14:00	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해 본 조선의 보건제도	리성환 (조선사회과학원)
		민속 / Folklore	
	민속	사회 : 김성민 (건국대학교)	
	14:40	Moving between Worlds. Understanding Shamanism through Korean Myths from the Jeju Island	Catalina Stanciu (The University of Bucharest)
	15:10	다시 본 미추홀 역사	김영덕 (서강대학교)
	15:40	복식을 통해본 조선의 민족적 정통성	조희승 (조선사회과학원)
		철학·종교 / Philosophy & Religion	
	철학・종교1	사회 : 로학희 (김일성종합대학)	
	10:00	군위 인각사의 역사와 고고학적 발굴성과	김선 (불교문화재연구소)
	10:30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 사상과 그 가르침	서셀라 (절강성 온주시 제14고급중학교)
20 일	철학・종교2	사회 : 김선 (불교문화재연구소)	
	11:10	공자사상의 현대적 이해	이병욱 (고려대학교)
	11:40	동학은 조선민족고유의 진보적사상유산	로학희 (김일성종합대학)
	12:10	지눌의 『수심결(修心訣)』에 나타난 '마음 닦음'과 그 현대적 의의 - 남과 북의 『수심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김방룡 (충남대학교)
	12:40	정약용의 <심경밀험>에 나타난 윤리적 함의	김혜련 (충북대학교)

		0	
		교육 / Education	
	교육1	사회 :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10:00	미국, 일본, 한국의 고등학교 단위제 교육과정 비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	최정희 (단국대학교)
	10:30	스마트폰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 학습 -일본인 학습자 'ㄴ, ㅁ, ㅇ'의 철자오류를 중심으로-	박은주 (오사카조가쿠인대학)
	11:00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연어 교육 양상 연구 - 북경대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	부가준 (제주대학교)
19	교육2	사회 : 송창주 (오클랜드대학)	
일	11:40	한국인의 다문화 감수성: 한국교육의 미래에 던지는 경고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12:10	찌아찌아 한글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인류학적 재고 - 소라월리오 찌아찌아족의 민족정체성 인식에 미친 영향 -	김효진 (와세다대학)
	14:00	Effects of Playing a History Simulation Game on Spanish- Speaking Students:Post-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njung Min(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of Chil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
	14:30	Learning to live: Older Korean migrants' life-long learning experience in New Zealand	Anne Koh (The University of Auckland)
	15:00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발전동향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홍혜명 (김일성종합대학)
	교육3	사회 : 홍혜명 (김일성종합대학)	
	11:10	콘텐츠 창작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박재인 (건국대학교)
20 일	11:40	신체화되는 아이덴티티: 조선학교의 조선무용에 관한 고찰	송기찬 (리츠메이칸대학)
	12:10	조선에서 학교교육을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결합시킨 경험	김성국 (조선사회과학원)
	12:40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시제 습득 양상 분석 - 담화구조가설을 중심으로 -	박상경 (연세대학교)

		정치 / Politics	
	정치1	사회 : 이상협 (하와이대학)	
	10:00	한(조선)반도의 분단체제와 평화구축의 전략	박영균 (건국대학교)
	10:30	남북의 국가 상징과 화해와 평화 상징으로서 한반도 디자인 활용	전영선 (건국대학교)
	11:00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한(조선)반도 평화구축	김병로 (서울대학교)
19 일	11:3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 종교 및 문화유산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박광수 (원광대학교)
	12:00	함석헌의 평화사상으로 재해석한 촛불집회의 공동체적 함의	전철후 (성공회대학교)
	정치2	사회 : 미무라 미쯔히로 (ERINA)	
	14:00	How Hav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Developed since the Second World War?	ISOZAKI Atsuhito (Keio University)
	14:30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도지인 (건국대학교)
	15:00	조선에서의 국가건설경험	전하철 (조선사회과학원)
	정치3	사회 : 리경철 (조선사회과학원)	
	10:00	분단적대성 지표 개발의 타당성과 그 활용 가치에 대한 논의	김종곤 (건국대학교)
	10:30	한국 소득불평등의 정치적 원인: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와 정치적 원인을 중심으로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20	11:00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주체철생산공정확립에 대하여	박성철 (조선사회과학원)
20 일	정치4	사회 : 김병로 (서울대학교)	
	11:40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 법 률적환경에 대하여	리경철 (조선사회과학원)
	1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법제도 발 전	미무라 미쯔히로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12:40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이상협 (하와이대학)

8					
		예술 / Arts			
	예술1	사회 : 진윤경 (부산대학교)			
	10:00	조선의 좌익미술 계보와 도상학적 분석	기다 에미코 (오타니대학)		
19일 20일	10:30	Bauhaus in Pyongyang: Architecture of Multiplicity in Postwar North Korea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1:00	Korean wave as a global phenomenon	Marlena Oleksiuk (Wroclaw University)		
	11:30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and its transformation: Cross-comparative perspectives from surrounding regions (Northeast China, South Korea, and Japan)	Haeeun Shi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예술2	사회 : 김종군 (건국대학교)			
	12:10	북한 대피리의 디아스포라 -재일 북한대피리 연주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윤경 (부산대학교)		
	14:00	민족수난기 조선동요에 비낀 민족심리와 정서	우광영 (김일성종합대학)		
	14:30	향가의 《3구6명》에 대한 리해	김철 (조선사회과학원)		
	16:10	다큐멘터리 영화『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재일코리안 음악-』 The Documentary "Crossing over the Arirang Pass -Zainichi Korean Music-"			
	예술 -아리랑-	사회 : 모리 토모오미 (오타니대학)			
	10:30	남북의 <아리랑> 연구사 비교	김종군 (건국대학교)		
	11:00	각 지방 《아리랑》의 형상적특징에 대하여	리영호 (조선사회과학원)		
	민속 -식문화- / Folklore -Food culture-				
	민속 -식문화-	사회 : 이지치 노리코 (오사카시립대학)			
	11:40	자이니치 코리안의 음식문화에 관한 고찰 -조상 숭배 의례 음식을 중심으로-	고정자 (고베대학)		
	12:10	보시와 감사의 각인: 동아시아불교의 발우공양 의례	김성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2:40	우리 인민의 식생활발전에서 민족발효음식이 논 역할에 대하여	공명성 (조선사회과학원)		



『조선/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모색과 전망』

Exploring Prospects for Systematic Peace Buildingon the Korean Peninsula

사 회	서정근 야마나시	현립대학	
	_	Seo Jeong-Gun Yamanashi Prefectural University	
고 유	환 동국대학교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	Koh Yu-hwan Dongguk University 주의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16
심 승	건 조선사회과학원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	Sim Sung Gon Academy of Social Sciences >립에 대하여』	23
백 태	응 하와이대학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법	Tae-Ung Baik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법적 기반에 관하여』	28
김 경	일 베이징대학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고	,	39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고 유 환 동국대학교

1. 머리말

2018 년 4월 27일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데 이어,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70 여년 동안 유지해 왔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판문점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역사적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결시대에서 평화시대로 한반도 질서를 바꾸는 이정표가될 것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은 냉전적 적대질서를 공존적 평화질서로 바꾸는 '판문점체제'(정전협정에 기초한 냉전적 분단체제) 해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은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원년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1996년 4 자회담, 2005년 6 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을 맞는 2018년에 종전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 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북·미 사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환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 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평화우선주의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태동

문재인 정부는 '오직 평화(only peace)'란 말로 함축할 수 있는 평화우선의 한반도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병행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우선의 가치이자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라며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구상의 핵심은 2017 년 7월 6일 베를린에서 밝힌 '신 한반도 평화비전'('베를린 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

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베를린 구상은 ①북한붕괴, 흡수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오직 평화 추구, ②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③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⑤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베를린 구상에 담아 발표하고 남북 사이의 신뢰회복 을 위해 노력했다. 안보리 대북제재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등과 관련한 남북경협 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베를린 구상은 대부분 현실화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구상'이 2000년 '6·15 공동선 언'으로 이어졌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진화하고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재확인됐다.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북미공동성명을 통해서 4 개의 기둥을 세웠으나, 하노이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지붕을 씌우고 기초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과 초기이행 조치를 만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 빠진 것은 합의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오독'(또는 '의도적 무시')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북미 공동성명의 2 항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3 항 완전한 비핵화문제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일괄타결 할 포괄의제로 생각한 것 같고, 미국은 합의내용을 연계된 포괄적 의제로 보지 않고 '4 개의 기둥(four pillars)'이라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우선론과 제재유지론을 펴면서 북미 핵협상이 상당기간 교착국면에 빠졌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둔 '안보-안보 교환의 한반도 비핵평화 프 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은 선 신고·검증 등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 구하거나, 비핵화 범주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전반을 폐기해 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일괄타결식 '빅딜'안을 내놓음으로써 한반도 비핵평화 프 로세스는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3.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평화경제론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지난 100 년 동안의 대립과 갈등의 한반도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100 년을 준비하는 평화협력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번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 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한반도체제는 ①우리가 주도하는 100 년의 질서로, 국민과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 ②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로,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 ③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년 남북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히며 한반도 종단철도 완성을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고 이를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1 절 기념사를 통해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대립과 갈등을 끝낸 평화협력공동체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경제협력공동체로 평화경제의시대를 열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본격화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평화경제론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경제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나왔던 '경제평화론'의 담론의 연장선에 있지만 평화가우선이란 점에서 구별된다.

평화경제론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담론으로 평화우선주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선순환을 부정할 순 없지만 평화협력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평화경제론은 북한의 '국가핵무력완성'에 따른 안보리 제재와 미국 등 개별국가들의 대북제재 등으로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동하지 않으면 경제협력도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도 평화경제의 관점에서 해석할 부분이 있다. 2018 년 4월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결속하고 '사회주의경제발전총력집중노선'을 채택한 것은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구상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미국과의 '평화담판'의 범주에 넣어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정전체제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로의 전환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북미 핵협상의 타결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평화경제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진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신한반도체제 구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신한반도체제의 원년으로 삼아 신한반도체제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평화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 생활협력공동체 형성을 가속화하여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연합으로 나아가야 남과 북이 주도하는 신한반도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등 미중패권 경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한일갈등 심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남북협력과 남북관계의 주도성, 자율성, 독자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판문점 회동과 비핵평화 프로세스 불씨 살리기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3 국 정상들이 상봉한데 이어 '사실상 3 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는 북미정상회동이 이뤄졌다. 하루 만에 '번개'처럼 전격적으로 북미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양 정상들 사이의 신뢰가 있고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의 궁합(케미스트리)이 맞고 심리적 간극이 좁혀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트위트)를 통한만남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북미 정상은 멀리 3 국에서 어렵게 만날 필요 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수 있는 사이가 됐다.

6·30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이 이뤄진 배경에는 올 하반기에는 교착국면을 풀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양 정상은 지금이 비핵평화협상을 재개할 적기로 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작한 미국 대선레이스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가을 무렵에 성과를 내야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상봉과 회담을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도 과언은아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합의도출 실패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서 찾지 않고 그참모들에게서 찾고자 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했다가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제를 부과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넣어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고자 했지만 참모들이 반대해서 하노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톱다운방식의비핵평화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다. 북한은 6월 27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권정근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제대로 된 협상자세를 가지고 말이 통하며 온건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 7 월 1 일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한 '진심외교'가 판문점 상봉을 성사시킨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새로운 전략국가 조선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지역의 역학구도변화에 의해 오늘의 격동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수뇌합의로 시작된 평화의 흐름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불가역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후 "포괄적인 좋은 합의에 이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이 수주일(2~3주) 내 실무팀을 꾸려 협상을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불씨가 살아났다. 하노이 2 차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미국이 밝힌 협상목표는 ①비핵화 개념 정의, ②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추진, ③이행로드맵 작성이다. 이 목표는 앞으로도 북미 실무팀이 집중적으로 협의해야할 과제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7월 2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월 30일 한국에서 워싱턴 DC 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미국은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결과 함께 비핵화 최종상태(end state)에 대한 개념, 그 개념 안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나 인적 대화의 확대, 양측 수도에서의 주재와 같은 관계개선 조치 등의 양보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과 일부 타협(give and take)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상대 수도에주재하는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내비췄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이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협상을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동시병행(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요구하면서 포괄적합의와 포괄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가 신뢰의 문제로 비핵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접근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무협상의 진전 여부는 비핵화 개념을어떻게 설정하고, 북한의 단계별 동시행동과 미국의 동시병행 사이의 접근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동시병행적 이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단계적 이행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기되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답변해 미국과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영변 핵단지가 폐기되면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거란 판단이었다"며 "그런 조치가 실행되면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를 고민할 수 있을 거란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영변 폐쇄)은 하나의 단계다. 아마 올바른 방향의 한걸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폐기를 비핵화 '입구'로 보는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판문점 회동 이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하노이에서 확인한 상대의 우려사항과 요구사항을 드러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협상에서도 진전을 기대할 수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1 년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밝은 미래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상호 불신 때문일 것이다.

비핵화 검증단계에 들어가면 신뢰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부각할 수밖에 없다. 이미 북핵문제는 과학적 신고·검증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선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가동을 먼저 중단시키는 동결조치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비핵화 개념과 포괄적 합의 부분에서도 단번에 무장해제에 가까운 선비핵화 달성을 위한 일괄타결은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서두르지 않되 포괄적 합의와 단계별 이행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남·북·미가 상호이익의 공통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원, 인위적 통일 불추구(3-No) 입장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정책 기조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정하고 체제전환, 정권붕괴, 흡수통일, 무력침공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붕괴론'으로부터 벗어나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기다리는 정책'과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이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평화공존론을 펴면서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지금의 정세전환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책전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면조성은 한국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북한의 경제발전총진군노선 사이에 이익의 조화점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조성이 무엇보다시급하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둔 안보-안보 교환의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적인 선비핵화 행동인 신고·검증을 요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추가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등 북미 사이에 신뢰부족을 들어냄에 따라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는 본격화하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선비핵화론을 펴면서 비핵화 추가조치를 요구하거나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평화체제-비핵화 교환을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9 월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상응조치(제재완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를 교환하는 단계별 동시행동 방안을 남북합의 형식으로 내놓았던 것도 신뢰조성과 관련이 있다. 북·미 사이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동시행동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다. 북한은 신뢰를 쌓기 위한 선 행동조치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미국은 북한의 선 행동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WMD) 전반을 비핵화 범주에 넣어 빅딜 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모든 북한위협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평화담판'의 범주에 넣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다뤄야 하고, 한미군사연습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평화협정)과 상호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의제가 모두 나왔다. 앞으로는 북미협상을 통해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별 이행방안을 위한 이행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쟁점이 드러나고 우려수준과 요구수준이 높아져 작은 타협으로 만족하기 어렵게 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타결과 단계별 이행을 모색해야 한다. 톱다운 방식의 양자협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미, 남북미중 등 다자협상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에 대하여

심 승 건 조선사회과학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여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바라는것은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보장되지 않으며 그 누가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세계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그러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에 대하여 2 가지 체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둘째로,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1.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것은 우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접 잇 닿아있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는 제 2 차 세계 대전후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고 복잡한 열점지대로 인정되여왔습니다. 지금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있고 우리 민족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되고 쉽게 우리 민족은 핵참화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 특히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건설에 힘을 집중하고있습니다.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소중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세가 안정되고 나라의 안전이보장되여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모든 힘을 집중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열점지대인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나중에는 신성한 조 국강토에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들씌우게 될것입니다.

-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련결되여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세계의 초점으로 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중 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은 많은 사회력사적 및 정치군사적문제점들을 안고있는 매우 예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되여있지 않습니다. 이 러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바로 조선반도가 자리잡고있습니다. 때문에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증대와 긴장격화는 곧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며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이 지속되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으며 그것은 곧 동북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가 핵전쟁의 불도가 니에 빠져들게 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 전을 보장하는것은 전인류의 리익의 견지에서 볼 때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습니다.

이처럼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과 인류를 전쟁의 참화에서 구워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입니다.

2.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 장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민족앞에 걸머진 중대한 책임감과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 할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 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습니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은 크게 북과 남사이와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평화보장체제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갈라볼수 있습니다.

<u>- 우리 공화국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정책으로 정하고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u> 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 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 대헌장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정책적립장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정책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제기한 방안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985 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7 기 제 4 차회의에서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민족적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로서 쌍방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제안을 제기하였으며 1988 년 7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채택을 위한 국회련석회의의 소집문제를 제기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국회와 미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습니다.

남조선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채택을 위한 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하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채택할것을 제의하였으며 미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우리와 미국회사이에 회담할것을 제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서 쌍방국회들이 협력할수 있는 대책적문제들을 협의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1986 년 6 월 17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며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한미련합군사령관》과 남조선《국방장관》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호상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를 협의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 8 기 제 1 차회의에서 북남고위급정치 군사회담을 열고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할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회담에서는 정치분야에서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 문제, 군사분야에서 무력축소, 군비경쟁중지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위원들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은 1987 년초에 남조선《국무총리》와 《국방장관》에게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열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수차 발송하였고 우리 정무원과 인민무력부 대변인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1987 년 7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대책으로서 북과 남사이에 대규모적인 단계별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1990년 5월 31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안에서는 북남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일체 군사연습과 훈련을 제한하고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며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문제, 북남무력축감과 외국무력의 철수문제,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문제들이 언급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보장을 위한 수많은 제

안들과 발기들을 하였습니다.

<u>- 공화국정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u>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은 국제법적수단들을 통하여 진행되여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있는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 로서는 대체로 교전국가들사이의 평화조약체결, 주변국가들과의 군사동맹조약체결, 유 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의한 평화유지활동, 영구중립선언발표 등을 들수 있습니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정부는 우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해 나서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평화협정은 적대적군사행동의 림시중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과는 달리 전쟁 상태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종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국제조약입니다.

1953 년의 조선정전협정은 전후 평화관계수립의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려는 공화국의 주동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일시적인 교전중지가 아니라 조선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확립할것을 예견한 국제법적문건으로 채택되였습니다.

정전협정에서 핵심조항은 제 60 항입니다. 그것은 이 조항에 의하여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가 규정되였고 그것이 차후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명백한 법률적근거로 되였기때 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과 미국사이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상태가 계속되고있습니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전 쏘련, 중국과의 조약 체결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투쟁해왔습니다.

1961 년 7월 6일과 11일에 체결된 조쏘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는 체약국쌍방의 어느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에 다른 한 체약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원조까지 포함한 온갖 형태의원조를 줄데 대하여서와 두 나라 공동의 리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국제적문제들에 대한협의, 조선의 통일에 관한 립장 등이 규정되여있습니다.

1960 년대에 체결된 이 조약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대립이 첨예화되던 당시 동북아시아,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데서 긍정적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랭전이 종식된 후 사정은 달라졌다.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로 와르샤와조약기구가 해체된 후 이전 쏘련과 군사동맹조약을 맺었거나 그의 영향하에 있던 나라들은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안전과 운명을 지키

는데서 이전 쏘련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정부는 또한 유엔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도 진행하여왔습니다.

유엔헌장 제 1 조 1 항에는 유엔이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평화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하며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수 있는 국제적분쟁 또는 사태의 조절 혹은 해결을 평화적방법으로 정의와 국제법적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있습니다.

유엔헌장에 규제된 유엔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관심할것을 기대하였습니다.

1975 년 유엔총회 제 30 차회의에서는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공화국의 제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되여 주변지역나라들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들에서 친선협조관계가 적극화되여나갈 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더욱 공고한 것으로 되고 동북아시아지역경제는 보다 새로운 활기를 띠고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쟁을 방지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해나갈것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에 관하여

Legal Framework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백 태 웅 하와이대학

[논문초록]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분위기 변화 속에서 남북 협력이 단편적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의 수준을 넘어서서 장기적 남북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가려면 교류와 협력 관련 법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통일을 전망하는 법률시스템으로의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북한의 형법과 노동당 규약 등의 체제 등 남북 모두 과거 냉전 체제에 근거를 둔 법률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류와 협력의 진전 과정에서 교류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남북 관계의 역사적 변화 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일부 법률적 문제와 1970 년대로 부터 현재에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된 남북간의 합의 및 협정들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남북 양측이 진행해 온 조치의 궤적을 짚어 보며 향후 법적 기반의 확충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헌법 체제의 변화를 고려 하되, 현 단계에서는 남북관계의미래를 열기 위한 양측의 법적 제도를 통일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기존에 남북간의 여러 선언과 협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고,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재검토와 함께 남북관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 글머리에

현재 한반도와 그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한 정부가 각각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 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아시아와 세계 정세가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한 국면이다. 1880 년 중국 청나라의 주일본 공사관 참사관이었던 황준헌이 집필한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시대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해야 한다는 매우 잘못된 국가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중국의 외교적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 및 외교 정책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내리고, 제국주의적 세계 분할의 추세 속에서 일본과 미국이 식민주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배후에서 추진하던 전략에 대해 전혀

무지하였던 조선에게 최악의 강대국 의존주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김홍집, 박영효 등 수신사 일행이 이를 고종에게 전달하여 사실상 조선의 외교 정책으로 반영되게 하였고, 이와 같은 잘못된 외교 전략과 노선 속에서, 조선은 결국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에 합병되어 식민지화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 지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 지난 30 여 년에 걸쳐 유지되어 온 과도적 관리체계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 접어 들고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세력관계속에 새로운 국제적 지역적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개방개혁에 성공하며 대국굴기 (大國崛起)를 추진하고 일대일로를 내세워 미 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경우도 크리미아 점령을 계기로 본격화 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존립을 지속하며 아시아에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 속에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항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한 몫을 담당하여 지역 내 의 영향력을 지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 핵개발의 위험을 강조하 면서 북한을 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를 위한 대리 적(敵)으로 활용하며, 지난 30 여년간 아시아 지역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회복과 중국의 부 상에다, 1990 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한 미사일의 개 발을 통해 안보상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의 완전한 성공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이 개발되어 북한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면에 왔다. 북한은 현재 NPT 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가진 핵무장국가 되었다. 또 미사일이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문제를 더 이상 지역 전략차원의 하위 변수로 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북한과의 근본적 관계 설정을 다시 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9.11 이후 반테러 전선에 입각하여 알카에다와 ISIS 등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전략을 견지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반테러 전선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적을 최대의 위협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여 그 주춧돌을 다시 놓았고, 그 내용이 의회가 채택한 국방수권법에 그대로 담겨 있다. 2019 국방수권법에는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되어 있다. 의회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패권, 영향력과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유럽과 중동의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체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전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또한 핵무기,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위험한국가이며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이루어 내

는 것은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 속의 고난도의 함수를 푸는 문제와 같다. 과연 새로이 떠오르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 등 대국간의 냉전적 대결의 기류 속에서 남북한과 미국 간에 완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이 가능할 것인가?

2. 정전협정에 근거한 남북한 분단체제와 남-북-미의 군사분계선 월경의 법적 함의

지난 2019 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손을 잡고 북쪽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쪽 평화의 집으로 넘어가서 제 3 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넘도록 허가 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가는 매우 흥미 있는 질문이다. 판문점은 현재 유엔군사령부가 관리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실제 남한, 북한, 미국의 정상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각국이 취하는 태도는 정전협정과 현재의 비무장지대 (DMZ) 및 공동경비구역 (JSA) 관할권과 관련하여매우 미묘한 쟁점을 던져 준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상의 주권을 가진 정부이지만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을 통해한 당사자로 발을 딛고 있는 것이다.

2018 년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서울-신의주간 경의선철도와 개성-문산간 도로연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관리,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남한과 미국, 북한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미군이 대표하고 있는 유엔사는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를 대리해서 비무장지대내의 지뢰를 제거하고 철도와 도로공사에 필요한 안전보장대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남한에 그에 해당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서한을 북한측에 전달했지만, 그것이 비무장지대 관할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권에만 국한될 뿐이라고 하였다. 북한측은 미군이 아닌 남측이 전체적인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상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판문점 선언 실천 협의는 여전히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포함하는 비무장화는 완료되었지만, 남북이 합의한 JSA 자유 왕래와 공동근무는 아직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기간에 시작된 유엔사의 존재와 정전협정의 조항과 관련 지어 보면 남한의 주권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결의 제 82 호에 따라 북한군의 적대행위 중단과 철수를 촉구하고, 이어 제 83 호 결의에서 유엔 회원국에 한국 지원을 촉구했고, 7월 7일 제 84호 결의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 구성, 미국에 연합군 사령관 지명 요청, 유엔기 사용 등을 승인하여 7월 24일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유엔사가 일본에서 출범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지휘권을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에 위임하였고 7월 16일에 이를 받아들여 한국전쟁부터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게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17개국 93만여명의 병력을 자랑하던 유엔사가 10명으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5명의 연합군측장교를 임명하게 하였으며, 정전 협정 발효 뒤 3개월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정치 협상을 시작하기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1957년 한국으로 이전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1979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는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을 모두 행사해 오다가,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합동참모본부로 이전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에서 손에 쥐여져 있다.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채택하여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 시키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는 지금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유 엔사령부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엔에 보고 하지도 않는 등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또 정전협정은 유엔사 사령관이 북한 및 중국 사령관과 서명하였고, 한국과 미국은 모두 빠져 있어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 계를 규정하는 협정으로는 매우 불완전한 임시적인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궁 극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 축을 완성하는 일은 한반도 주변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분단 법제와 정전협정 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한은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오랜 냉전 속에서의 대결의 역사 속에서 서로 상이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왔다. 한반도 분단은 2 차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본 군의 무장해제와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에서 비롯되었으나 남한과 북한은 공히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별도의 헌법과 법률체계를 갖춘 두 개의 체제로 존립하게 되었다. 특히 1950-1953 년 기간 동안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을 가르는 법제는 더욱 공고화되었고, 그러한 법제는 이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되면서 별도의 체제로서 오늘에 이른다. 북쪽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지도부의 교체를 경험하였고, 남쪽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여러 변화를 겪었다. 한국에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군부 권위주의정부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이어졌고, 지금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문제점과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혁신과 남북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 년 6 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07 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차원의 실제적 교류의 경험이 쌓여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18 년 4 월 27 일과 5 월 26 일, 9 월 18 일 등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3 차례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어 이제 남북한 관계는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사실 분단체제로서의 남북한 정부는 각각 스스로를 유일한 정통성있는 정부로 간주 하고 있지만, 또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남북한의 관계를 다루는 법제는 매우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 고 있다. 그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고무찬양 등 여러 조항을 통하여 남한 주민이 북한체제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기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본질적인 측면을 규제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안을 다루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 또는 주민 접촉 승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승인 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도 엄격한 승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평화적 통일을 구 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2005 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 진되어야 하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법률에 준하는 공포의 절차를 고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하나도 없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형법은 남한과 관련이 된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법률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가령 제 60 조 국가전복음모죄의 경우 반국가적 목적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고, 제 63 조는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행위를 조국반역죄로 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또 사회안전단속법 제 9 조는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감시법과 행정처벌법 등에서 다양한 처벌과 통제의 조항들이 개방적 남북 관계와 자유로운 교류를 규제하고 있다.

남북한 양 정상과 당국자 간의 다양한 교류는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아직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의 경우 북한핵과 관련한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하여 교류와 협력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는 1993년 유엔안보리 결의 825호를 필두로 하여,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현재 남북 경제협력은 유엔의 제재조치로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멸공통일 또는 전국적 혁명의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대화 부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1972 년 7.4 공동성명 이후 통일 논의의 새로운 계기를 맞는다. 남한과 북한의 헌법은 각각의 독자적인 법체계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일을 위한 공동 모색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도 있다. 남한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규정하고, 제 3 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 또 제 4 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 제 9 조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여 남북한 모두 분단을 임시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지난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존재는 군사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었고, 북한의 경우도 미국 및 남한과의 지속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희생되는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분단과 대결의 구조가 이어 지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화해의 필요성은 수시로 제기되고 공감을 이루어 왔다. 그에 따라 남북한 간의 통일을 위한 논의는 여러 발전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진전을 보여왔다. 특히 남북간에 대화의 진전에 따른 교류와 협력의 확대 속에 상호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1972 년 남북은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는 통일원칙에 합의하였다. 1991 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또 2000 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는 것등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의 과정에서 2005 년 채택된 6 자회담 합의문 에도 이어졌다. 6 자회담 당사자들은 6 자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고, 또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광약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지며,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비록 비핵화를 위한 6 자회담의 합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구체적 이행으로 나아가지못했지만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연관된 여러 청사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2007 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10.4 선언은 남과 북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 수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며,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 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 자 또는 4 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 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 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추진된 위의 공동선언의 내용 은 2018 년 4 월 27 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고 있다. 판문점선언은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 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지향을 밝히며,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친척 상봉, 동 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 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 화지대로 전환, 평화수역화, 군사적 보장대책, 군사당국자회담 및 장성급 군사회담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또한 남북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 군축, 종전 선언, 정 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에 합의 하였다.

그에 이어 2018 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공동선

언에서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에 이어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다.

4. 상황의 변화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의 필요성

오늘날의 남북, 북미 대화는 북한에서의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한 미사일의 개발을 통한 안보상의 지형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평화를 위한 대화를 더 이상미를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2011년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북한의 선군노선은 병진노선을 거쳐 경제발전 중심으로이행하고 있다. 동시에 남한의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종식되고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발하여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응하여 남-북, 북-중,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이루어 지면서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013 년 3 월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병진 노선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노선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한 미사일 개발 등을 급속하게 이루어, 2017 년 11 월에는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2001 년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장기 전략은랜드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헤게모니의 부상 방지, 지역 안정성의 유지, 아시아의 변화와 분쟁에 대한 관리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대북한 기본 전략은 대량살상무기 확 산저지, 미국 및 우방국에 대한 공격 예방 등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핵개발 완성 선언과 미국에 도달 가능한 핵무기의 개발로 인하여 근본적 사정 변경이 일어난 상태이다. 한국 내의 정치환경 변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의 점증하는 긴장 관계,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하기를 원하는 중국과 그에 대항하여 평화헌법을 개 정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추구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일로 매진하는 일본 등 아시아의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다.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외면할 수 없지만, 또한 선 핵폐기 후 대화라는 방식으로 핵폐기를 모든 대화와 협력의 출발점으로 상정한 접근방식 또한 작동이 되지 않는 국면이다. 결 국 핵문제는 단계적, 점진적, 쌍무적 행동 과정으로 접근 할 수 밖에 없고, 일차적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 중지와 핵 동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핵감축과 핵의 근본 적 제거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진행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미국 등 개별국가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된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포함한 평화를 위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정부는 핵과 미사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유엔 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모색하고 있다.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사적 긴장의 완화, 외교적 노력의 확대 및 지속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진행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전쟁 이후의 정전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 대화의 교착상태에서 쌍중단, 쌍궤 병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지하며 남북한, 북미의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고, 이제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논의는 느리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최근 북한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984 년 합영법의 제정을 필두로 하여 1992 년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환관리법, 국제사법과 대외경제중재법 등 여러 비즈니스 법을 제정하여 외국 기업의 북한 내 투자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게다가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새로운 대외적 환경" 속에서 "자본주의시장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대외교류를 전환" 시킬 필요성에 부응하는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여 "단순한 무역교류나 합영, 합작이 아니라 대외경제교류를 폭넓게 전개하면서도 다른 나라 기업이나 기술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대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추진해 왔고, 그러한 목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와 각 도 경제개발구를 포함하여 25 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와 협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합영, 합작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시기 남북간의 합작 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금강산의 경우 2008 년 7 월까지 192 만 6665 명의 남한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2008 년 7 월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의 경우 2016 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유엔의 제재와 북한과 미국간의 교착상태가 해소되고,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 및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전될 환경이 형 성되면, 남북한 관계는 오랜 동면상태를 끝내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포함한 남 북협력을 통한 번영과 평화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 한 협력과 개입 속에서 남북한 모두 경제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만약 비핵화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경제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상당한 긴장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지적 무력충돌의 가능성마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더욱 진행되고 중국과 북한의 밀착 속에서 아시아는 신냉전의 대결로 떠밀려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의 동결, 핵무기 및 재래식무기의 감축, 비핵화의 추진 등이 상호 교류 협력의 확대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현실적 해법이고, 또 이것이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의 장기적인 지역 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5. 결론

남북한 간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협정으로 형성된 현 체제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조 일석에 해결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미루어둘 수는 없다.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화를 진행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서방 여러 국가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협력을 진행하여 북한 사회와 국제사회간의 개방적 경제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내야한다. 나아가 핵문제 등의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실제적 생활과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도 진행하고 학술적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교류와 협력의 법적 프레임을 새로이 만들어 가야한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6.15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진로를 선언해왔다. 그러한 합의가 이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 남한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 존립하고 있는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역할,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연관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떠한 협력 메커니즘을 형성할지를 재정립하고 그와 관련한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이후 유엔사를 대체할 새로운 통합 지휘체계의 구축문제, 또 정전협정체계에 따라 존립하고 있는유엔사 및 중립국감시위 등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또 유엔사의 형성에 관여한 여러 참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도함께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 국내적으로 자국의 헌법과 국내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교류촉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및 향후 통일의 초석을 놓는 남북관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북한도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헌법과 조선노동당의 규약 및 국내 법령을 정비하

고 교류 및 합작 사업의 확대에 기반이 되는 법령을 마련하고 보완해가야 한다. 또 남 북간의 관계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남북한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하 고, 나아가 남북한과 중국 및 미국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체제의 틀을 세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마련해 가야 한다. 기존에 남북간에 채택한 6.15 공동선언이나 불가침선언, 판문점 선언 등 여러 협정, 선언 등이 공고한 법적 성격 을 갖는 문서로 만들고 그 이행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문서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또 남북한 사회의 별도 법률체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해결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형사문제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범죄인 인도, 민사 상의 법률문제, 행정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의 폐기를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의 동결, 북한의 NPT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력충돌이나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 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또 핵무기와 미사일 재 래식 무기 등을 정확히 통제하고, 핵감축을 실현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영속적인 평화체제의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협정과지역 안전보장 체제에 대 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재개를 포함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핵문제에 대한 협의 및 비핵화의 추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방도를 마련 하는 것 이 시급하다.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지난 한국전쟁 이후 불안전하게 지속되어 온 지역 내의 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북한은 물론 지역 내의 여러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관계 정상화, 지역 협력의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도 더욱 개방되고 변화하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인권 대화와 학술적 교류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요컨대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맹목적 증오와 불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서 교류와 확대를 확대하여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지역의 안정과 협력 속에서 궁극적으로 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 지는 길을 찾아 가야 한다.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과 동아시아질서

김 경 일 베이징대학

1. 들어가는 말

조선반도는 동북아의 림랜드(Rimland)로 불린다. 그것은 조선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동북아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불가예측속에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반도가 자리잡고 있는 동북아는 지경학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 북조선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한 축을 장식할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의 중일한 삼국은 그 경제 총량이 아시아의 70%, 세계의 20%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동북아는 아직도 유럽이나 북미자유무역구, 아세안과 같은 경제협력체,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삼국의 역사문제, 중일간 지역주도권 쟁탈, 역내 안전문제, 민족주의정서와 심리적거리감, 패권대국 미국의 영향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조선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못한데 있다.

조선반도는 사실 지난 한세기가 넘게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19 세기말의 청일전쟁으로부터 20 세기초의 러일전쟁, 일본의 조선반도식민지화, 그 후의 중일전쟁, 조선전쟁, 냉전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는 늘 동북아 지각변동의 진원지로 되어왔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결국 동북아가 근대사 이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대-근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동아시아질서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국제전쟁은 거의 모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세력다툼으로 일어났다. 중국이 말하는 5 차례의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조선전쟁이 바로 그랬다. 전쟁은 예외 없이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일어났거나 조선반도를 배경으로 일어났다.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의 말을 빌린다면 "기원전 1 세기이래 조선의 국제적지위는 대체적으로 중국의 패권지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모겐소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일간의 경쟁이란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하던 기존질서에 대한 일본의 도전에 의한 것이였다. 다시 말하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질서는 대체로 대륙국가 중국이 주도하는 "화이질서" 또는 "조공질서"였으며 여기에 대한 도전은 주로 해양국가인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반도가 전쟁발발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조선반도가 바로 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른바 "1 차 중일전쟁"은 백제가 멸망한 뒤 일본이 백제부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기원 663 년에 4 만명의 병력과 1000 여척의 전함을 이끌고 조선반도 백강구에 와서 당나라군과 신라 연군과 교전을 벌린 "백강구전투"이다. 이 전쟁은 중일한 삼국이 동아시아에서 처음 치른 국제전쟁이다. 당시 일본은 당나라와 비교될 수도 없는 작은 세력인데도 국제적인 위치상정을 당나라와 대항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전쟁을 '일당전쟁(日唐戰爭)'이라고 불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당나라주도의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일본의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쟁은 일본의 실패로 끝났고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중국과 일본은 그후 600 년이 넘는 평화를 이루어왔다. 당나라중엽 중일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들어섰다.

"2차 중일전쟁"은 1274 년과 1281 년 원나라가 두차례에 걸쳐 일으킨 대일전쟁이다. 원나라가 일본을 자기주도의 질서에 편입시키기위해 벌린 전쟁이다. 그 출발점은 조선 반도였고 원나라의 핍박에 고려는 무려 1800 여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무려 60,000 여명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전쟁에서 교두보역할을 한 것이다. 원나라가 패한 이 전쟁은 일본이 동아시아 대륙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역사적계기가 되였다.

"3차 중일전쟁"은 바로 "임진왜란"이다. 1593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도미 히데요시가일으킨 이 전쟁은 명나라의 "중화질서"에 대한 일본의 도전이였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에 중국중심의 "천조예치질서"(天朝礼治秩序)가 확립된 시기였는데 이 질서가 바로 일본에 의해 "전례없는 도전"을 당한 것이다. 명나라는 두차례 출병하여 일본과 전쟁을 치렀다. 그것은 중국중심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전쟁은 중국과 일본의 정국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전쟁이기도 하다. 전쟁후의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로 정권교체가 되고 중국은 명과 청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조선에도 광해군의 정권을 뒤엎는 "인조반정"이 이루어진다.

고대로부터 일본은 동아시아체계밖에서 동아시아질서에 도전을 하여왔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이 중국이라는 "대륙세력"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일 어난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그 교차점에 있은 조선반도가 충돌과 전쟁의 무대가 되였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도전이 실패하게 되면 동아시아는 새롭게 정립된 질서속에 수 백년씩 평화를 누려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도전이 성공하고기존 동아시아질서가 무너지면 동아시아는 그 지각변동의 여파로 전쟁의 참화를 겪어왔다. 1894년의 "청일전쟁"으로 중국중심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동아시아는 "러일전쟁", "중일전쟁"으로 수난을 겪어왔던 것이다. 동방의 화약고로 불리는 조선반도는 늘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진원지(震源地)가 되어왔다. 중국은 바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이 수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몰락과 멸망의 길을 걸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 남북분단, 조선전쟁과 동아시아 체스판의 변화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투항하면서 일본이 지향하던 "대동아공영권" 질서는 막을 내린다. 새로운 질서구축기에 앞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신흥대국이 조선반도를 분할 점령한다. 명목은 일본군투항을 접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 다툼이였다. 해외에서 형성된 남북 두 진영이라는 내적요소는 미소라는 외적요소와 상호 작용하면서 분단체제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여파로 1 차, 2 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미국은 조선반도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으며 남북은 제로섬관계로 돌입하게 된다. 남북이 각각 정권을 수립한 후 미국과 소련은 조선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방대한 군사고문단과 "방어용"무기를 남겨 놓고 남북이 통일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평화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에 미소 철군 후 미소의 대치상태는 즉각 남북의 대치로 전변되었다. 결과적으로 남북은 1949 년 1 월부터 1950 년 6월 25일까지 "3.8 선"에서 무려 874차례, 하루 평균 두 차례의 무력충돌을 겪었다. 그렇지만 조선반도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과 소련 어느 일방도 이 무력충돌을 막으려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중재도 없었다. 남북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가 전무하였다.

이 시기 중국대륙의 공산당에 패한 장개석은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유럽의 북대 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성격의 태평양조약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뒤이어 한국 의 이승만대통령도 태평양조약기구의 설립을 호소하였다. 미국이 솔선수범하여 동아시 아에 국제적반공동맹을 구축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애치슨은 태평양반공조약의 이념 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동아시아는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혼돈상태이기 에 태평양동맹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장개석과 이승만이 제기했던 태평양 반공동맹은 논의만 무성한채 일년여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후 이것을 성사시킨 것은 바로 조선전쟁이었다. 미국기자 스톤은 "이전에 맥아더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승만과 장개석, 퀴리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던 태평양 반공동맹 문제 를 6 월 27 일 트루먼의 성명은 일거에 해결해주었다"고 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기간인 1951 년에 일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과 의 적대적관계를 끝내고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뒤이어 1953 년에는 한국과, 1954 년에는 대만과 "공동방어조약"을 맺었다. 동아시아에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 반공 동맹이 구축된 것이다. 조선전쟁은 조중소 "북방삼각"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 기도 하였다. 조중동맹관계도 "피로써 맺은 관계"로 자리잡으며 확실하게 강화되었다. 일본은 조선전쟁특수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다시 국제무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조선전쟁은 바로 애치슨이 말한 "혼돈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동아시아체스판을 변화시켰다. 조선반도에는 분단체제, 정전체제, 냉전체제 3위1체의 연동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동아시아에는 한미일 "남방삼각"과 조중소 "북방삼각"이 균세의 대결을 이룬 냉전의 장이 구축되였다. 조선전쟁은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질서 나아가서 동서냉전질서를 고착화시켰다. 조선반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3.8선"은 정전의 상징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소냉전의 분계선으로도 되었다. 결국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동아시아체스판의 변화는 모두 조선전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선전쟁으로 하여 중국은 미국과 전면적대결관계로 들어섰고 대만을 해방하는 기회도 잃게 되었다.

3.8 선에서 시작하여 3.8 선에서 끝난 조선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지만 전쟁 당사국들은 모두 승자로 자처하며 자신들이 치른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규명하고 있다. 그 조선전쟁이 맺은 "정전협정"은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쟁은 시공간적으로 오늘에 이르 기까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쟁인 것이다.

다른 한면으로 조선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지역전쟁을 세계대전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냉전구도에서 장기간 안정 된 태세를 유지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미소냉전과 남북의 평화프로세스

1950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석 달 내에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에서의 외국군 철수 문제 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전협정"의 이 건의는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그로부터 60 여년이 흐른 오늘에까지 조선반도에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조선전쟁으로 고착화된 분단체제와 정전체제가 동서냉전이라는 질서속에 편입되었기때문이다. 조선반도는 분단체제, 정전체제, 냉전체제 3위가 1체로 연동하면서 동서냉전의 전초선역할을 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프로세스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차원이라는 두 트랙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면서 전개되어왔던 것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 년에 열린 제네바회의는 조선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린 첫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조선대표 남일은 조선의 "평화적조 건방안"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남북의 군축,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조선반도의 평화 발전을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이 보장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 등이었다.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따른 자유선거, 선거 실시일 1 개월 전 중국군 철수, 선거실시 전 유엔군 점진적 철수 시작, 유엔에 의 한 통일독립민주한국의 권위와 독립보장 등이었다.

비록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각자의 평화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적요소로서의 남북은 모두 자기가 주도하는 통일을 추구하였으며 미소냉전이라는 외적 요소는 남북 각자가 추구하는 자기주도의 통일을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도 억제하였다. 결국 남북의 제로섬대결은 미소 두 진영 대결의 하위개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조선 반도에서의 적극적평화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조선전쟁이 막을 내린 1950 년대에 남과 북이 모두 무력통일을 지향했다고 하면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은 평화통일로 선회하면서 평화적공세를 벌렸다. 1972 년 3 월 조선 부총리 겸 외상인 허담은 미국과 조선이 정전협정의 사실상 당사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배경은 닉슨 미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중이었다. 그해 남북은 획기적인 "7.4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 원칙, 긴장상태완화, 상호신뢰구축,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 실시,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7.4 공동선언"은 1954 년도 쌍방이 제안했던 자기주도의 통일안과 달리 통일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한 원칙을 정하고 남북의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남북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이익이 대결상태에 있은 동서냉전의 전초선에 있었기에 남북이 자체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소냉전이라는 틀 속에서 남과 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문제를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실제 남과 북은 이 "7.4 공동선언"의 파급효과를 각자국내정치에 시의적절하게 이용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을 관철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통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의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결속에서 "냉평화"를 유지하여왔다.

조선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끝난 후 남북이 대결속에서도 대규모무력충돌과 마찰을 억제하면서 "냉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틀에서 보면 "정전체제"때문이였 고 큰 틀에서 보면 동서냉전속의 냉전체제때문이였다. 동서냉전의 전초선이었던 남북이 다시 전쟁의 불을 지폈다면 그것은 미소의 전쟁대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의 화해와 협력 역시 이 냉전구도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미소냉 전의 전 초선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상징하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역 으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였다면 조선반도에는 평화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는 충분조건에 가까운 필요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었다.

냉전시기 조선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한 것은 조선의 김일성주석이었다. 1984 년 9 월 18 일 김일성 주석은 일본사회당대표단을 접견한 자리 에서 3 자 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에 앞서 조선은 같은 해 1 월 미국에 "우리와 미국 사이의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참가시키 는 3 자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하였다.

조선이 주장한 3 자회담의 형식은 조선반도문제의 내적요소인 남북과 외적요소인 미국을 함께 엮어 조선반도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다. 조선반도 분단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남북분단은 조선반도에 개입된 외적요소와 내적요소가 상호 작용하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소대결의 요소와 남북 두 진영의 요소가 있었기에 분단체제가 잉태되었던 것이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듯이 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역시 이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내적요소와 외적요소가 상호 작용하면서 맺힌 응어리를 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주석이 제안한 3 자회담은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은 빛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 남북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와 협력이라는 평화상태

의 조성부터 시작하였다. 남과 북이 도출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그 것은 냉전종식이라는 큰 흐름 속에 남북한이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이기도 하였다. 조선은 계속 조선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전세계적인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변화의 흐름을 보였던 남북관계는 다시또 "남방삼각" 대 조선이라는 냉전프레임에 갇히게 되여 동서냉전시기보다 훨씬 국제화된 조선반도문제를 생성하게 되었다.

5. 조선핵문제와 동아시아 신질서구축의 힘겨루기

냉전이 종식되면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질서구축기에 들어섰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단행하면서 "북방삼각"이 해체되고 조선반도냉전구도의 한 축이 기울어지게되었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남방삼각"인 한미일동맹관계의 전략적기초가 약화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 시기 조선 김일성주석이 원했던 미일의 대조선 "교차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동아시아의 냉전구도가 해체될 수도 있은 것이다.

실제 냉전이 종식되면서 동아시아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남북의 "남북기본합의서"와 "조선반도 비핵화선언", 남북의 유엔동시가입, 조일간의 "수교정상화담판"이 이루어졌다. 1997 년 동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때에 중일한 3 국은 아세안무대를 빌려 "아세안+3"기제를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하나의 동아시아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되었다. 2000 년에 들어서서는 남북의 두차례 정상회담, 조일간 두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뒤를 이어 중일한 협력사무국설치, 중일한 자유무역구담판, 중일한 정상회담기제구축 등 양국, 삼국간의 협력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총량이 아시아의 70%를 차지하는 동북아에는 동북아범위의 다자안보체제와 경제협력공동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으로는 동북아 여러 나라들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 정치제도의 차이, 역사인식의 차이, 영토와 영해의 갈등과 분쟁 등등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동북아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세계 유일의 냉전구도와 그로 야기된 조선반도문제의 미해결에 있는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글로벌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냉전의 승자가 된 미국은 국제권력체계에서의 유일한 초대국의 실력과 지위로 미국주도하의 헤게모니체계를 가일층 강화하여 이른바 미국주도하의 평화를 실현하려 하였다. 거기에 동아시아가 유럽과 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이 와해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선반도에 세계유일의 냉전구도가 잔존할 수 있는 국제적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유럽의 동서독과 달리 동아시아의 분단국가인 남북은 여전히 제로섬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전략이익은 조선반도에서의 냉전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은 이것을 "미국이 항시적으로 우리를 겨냥하고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방패로 미국을 견제하고있으며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러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우리를 희생물로 삼으

려 하고있다"고 한다.

새로운 질서구축기에도 여러 강대국들의 이익관계, 갈등관계, 협력관계는 예외없이 조선반도에 굴절되었다. 그 축소판이 조선핵이며 조선핵에는 동아시아국제정치가 응집 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핵문제해결을 위한 "6 자회담"이라는 이 동아시아 초유의 장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힘겨루기의 장인 것이다. 그 장에서 조선핵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지난 시기와 달리 전쟁이 아닌 평화로 구축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핵 문제 해결을 위한 6 자회담은 사실상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한 첫 시도였다. 동북아 관련국들은 6 자회담의 틀 안에서 새로운 질서에서 지분을 나누기 위한 줄다리기를 했다. 그 결과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도출됐다. 조선반도 비핵화, 조-미, 조-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위한 실무그룹과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사실상 6 자가 함께 그린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밑그림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6 자회담은 조선핵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점차 지역안전보장문제를 다루는 장으로 되어왔다.

그렇지만 조선핵프로세스는 2008 년 6 자회담이 막을 내리면서 다시 험난한 노정을 걸어왔다.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으로 냉각기에 들어선 남북관계는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연동하여 악화일로로 치닫기 시작하였다. 그 시점은 중국이 일본을 초월하여 세계제 2 의 경제체로 떠오른 시점이기도 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화는 동북아 질서 구축에 큰 변수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중미관계는 "G2"로 불리면서 세계에서의 주요 모순으로 비화하였다. 그 갈등은 자연히 세계의 이슈로 떠오른 조선핵문제에 투영되었다. 조선이 2차,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부터 조선핵을 둘러싼 중미 갈등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조선의 핵실험때마다 중국은 계속 타깃이 되어왔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조선제재를 찬성하고 이행하면서조선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한미일은 여전히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이 조선에 대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바랐다.

조선이 4 차 핵실험을 한 이튿날 미국무장관 커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대조선정책은 실패를 했으며 지금은 조선에 대해 더는 과거의 방식으로 할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은 이 "중국 책임론"에 맞대응하여 "미국 책임론"을 펼쳤다. 중국외교부는 "조선반도핵문제의 유래와 매듭은 중국에 있지 않으며 문제해결의 관건도 중국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조선핵이라는 방울을 단 것은 미국과 조선이며 방울을 단 자가 방울을 떼라고 하였다. 조선이 요구하는 "조미관계개선", "평화협정체결", "안보우려해소"를 모두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

조선핵문제정국은 결국 "사드"정국을 파생하였고 중한 관계는 급랭하여 수교 후 최 악으로 치달았다. 중국은 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대조선제재안에 찬성하고 동참하면서 조선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중국과 한국, 조선은 모두 조선핵, 사드, 미 국이라는 요소에 의해 큰 진통을 겪어왔던 것이다.

6. 조미 3차례 정상회담과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

조선의 김정은체제 출범에 뒤이어 미국에 트럼프행정부가 등장한 2017 년에 조선 반도는 전례없는 위기를 겪었다. 트럼프는 역대 정부의 대조선 비핵화정책이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오바마정부가 취했던 "전략적인내"라는 대조선정책을 뒤엎고 비핵화를 목표로 조선을 최대한 압박하여 개변한 후 접촉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조선은 트럼프가집권한 해에 "대륙간탄도로켓(ICBM)장착용 수소탄 시험"즉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뒤이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 형을 발사하고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조선반도위기가 최대한 고조되었다. 그 위기는 2018 년에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중조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이 여러차례 열리면서 조선반도에는 경천동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열린 세차례 조미정상회담은 조선반도문제와 동아시아국제질서의 연동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노이에서 진행된 2 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슈퍼 매파"로 불리며 유엔 주재 대사 시절 조선,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경책을 펼쳤던 존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존 볼턴은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고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했다. 생화학무기를 포한한 조선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폐기를 비핵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이 받아들일 수없을 것이 분명한 안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조야에서는 일치하게 하노이 정상회담은 김정은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한 회담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2 차조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후 미국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북한 강경 모드로 대동단결하는 분위기"에 들어섰다. 트럼프가 내놓은 빅딜안을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핵화논의는 물건너갔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노이정상회담의 맥락을 보면 조미가 여전히 6 자회담때 주장하였던 선후 절차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자회담때 미국은 "선 핵페기 후 평화협정", 조선은 "선 평화협정 후 핵페기"를, 1차 북미정상회담후에는 미국은 "선 핵페기 후 종전선언", 조선은 "선 종전선언 후 핵페기"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선 핵페기 후 제재완화", 조선은 "핵페기와 제재완화 동시 진행"을 주장하였다. 종합해 보면 미국은 시종일관 "선 핵페기"로 조선의 완전한 핵페기를 압박하고 있다. 조선은 여전히 "단계별 동시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1 차 조미정상회담때 조선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종전선언"의 무산에 이어 2 차 정상회담의 "대조선제재완화"도 무산된 것이다.

1 차 조미정상회담때 조선이 요구한 "종전선언"은 사실상 "평화협정"체결의 입구로 상징적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왔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를 완강히 거부한데는 전략 적고려가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을 미국의 동아 시아전략과 연동시켜 고려하는 것이다.

브레진스키는 일찍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의 조선반도에서의 철군은 "일본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존재가 종식하는 상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일본인들이 일본영토에 배치돼 있는 미군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하면서 전략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 현상유지는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도 하였다. 키신져역시 "조선반도긴장정세가 크게 완화되면 미군의 존재는 한국 여야의 격렬한 쟁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군이 조선반도에서 철수하면 일본에서의 미군군사기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미일동맹은핵심축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안전보장과 핵우산을 제공하는 이 핵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6·12 싱가포르 미·조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주한미군'이었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손익계산을 해보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동맹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브레진스키나 키신져와 같은 전략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전략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 군사적 옵션의 명분 소실, 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 중단,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 사드 철수 문제와같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에 있어서조선핵문제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연동된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조선핵에 동아시아국제정치가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결국 하노이에서 존 볼턴을 전면에 내세워 냉전전략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존 볼턴을 움직인 것은 트럼프가 아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결정이 단기적으로 코언의 청문회영향을 받았기때문인지, 중기적으로는 조선핵타결을 내년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동아시아전략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의미에서 초대강국으로서 동아시아지역의 전략적주도역할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작금의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각변동은 당대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주요 모순으로 비화하고 있는 중미관계와 같은 시공간에서 연동되고 있다. 역시 조선반도문제가 동아시아문제의 핵심인 중미관계와 연동되어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동아시아전략이 조선반도문제에 투영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인 것이다. 그러기에 키신져는 "아시아의 미래는 많은 경우 조선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거취에 달렸다"고까지 하였다.

조선핵문제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연동이라는 시각에서 제 3 차 판문점 조미정상회 담을 보았을때 우리는 판문점에서의 "깜짝만남"이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른 "수도거성" (水到渠成)은 아님을 알수 있다. 비록 트럼프가 온화파라고 할 수 있는 비건을 내세우고 비건 역시 조선핵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법을 강조하지만 큰 틀에서 미국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조미 실무협상에서 악마를 만날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조미 핵게임에서 악마는 디테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큰 틀에서부터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조선핵문제의 발단이 동서냉전이 종식된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조선 생존전략의 충돌이었다면 오늘의 핵정국은 여전히 그 전략 적충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조선핵문제의 뿌리는 정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냉전구도에 있다고 인식하며 "냉전구도"가 존재하는 한 그로서 파생되는 군사적긴장이 멈출 수 없다고 인식한다. 한 반도에 잔존하는 냉전구도는 바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산물인 것이다. 중국은 조선 핵문제해결에서 표면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자는 표본겸치(标本兼治) 의 안을 내놓았다. 눈앞의 불을 끄자는 단기적 목표로 "쌍중단"을 내놓았고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쌍궤병진"을 내놓았던 것이다. "쌍궤병진"은 바로 조선반도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을 병진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저촉되는 것이다. 미국은 2 차세계대전이 끝난후 동아시아에 지역안보동맹구조를 구축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화하여 왔다. 미국이 아시아에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맹국에 있으며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리더역할도 동맹체계에 힘입는 것이다. 그 버팀몫역할을 바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인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조선핵문제해결 프로세스는 반드시 평화체제구축이 선행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 프로세스가 조선의 비핵화조치와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7. 나오는 말

지난 한 세기 넘는 동안 조선반도에는 적극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으며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했다. 조선전쟁 후 조선반도의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는 동서냉전과 연동하면서 여러 강대국들의 이익관계, 갈등관계, 협력관계, 전략관계를 조선반도에 집약시켰다. 작금의 조선핵정국은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국제정치의 축소판인 것이다.동북아국제관계가 조선반도에 굴절되었기에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은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대 주요모순관계를 이룬 중미양국의 협력은 조선반도문제의 가장 중요한 외적요소로서 변화의 조건을 지어주게 될것이다. 남북은 조선반도문제의 내적요소로서 변화의 근거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외적요소와 내적요소의 상호 작용이 결과적으로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의 중추적역할을 할것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동아시아는 다자안보체제, 다자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